

민주연구원 “22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에 대한 제안” 정책브리핑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8월 26일(수) <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>의 첫 번째 정책브리핑으로 “22대 국회 후반기 정개특위의 조속한 구성에 대한 제안”을 발간했다.
 - 이재영 원장은 “2026년 정기국회에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할 정치개혁 의제가 산적해 있다”며 “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 - 이 원장은 또 “정개특위는 경기규칙에 해당하는 정치관계법(공직선거법·정당법·정치자금법 등)을 다루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매우 어렵다”며 “2028년 총선까지 20개월이 남은 지금, 산적한 정치개혁 의제를 신중히 숙의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”고 주문했다.
- 정책브리핑은 역대 대부분의 정개특위가 매 선거에 임박해 급조됐고, 처리 시한에 쫓겨 공직선거법 본칙 개정 대신 부칙·특례로 땀질하는 ‘예외상태’가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.
 - 실제로 22대 전반기 정개특위는 개원 571일 만에야 구성돼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늦었고, 활동 기간도 5개월여에 그쳤다. 브리핑은 2028년 총선까지 20개월이 남은 지금이야말로 이 ‘예외상태’를 본칙 중심 체계로 ‘정상화’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.
- 정책브리핑은 이를 위해 정개특위와 별도로 ‘선거제도개혁특위’를 나란히 구성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.
 - 상시적인 정치관계법 조정과 당면 현안은 정개특위가, 2028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(준연동형 비례대표제) 개편은 별도의 선거제도개혁특위가 전담하자는 것이다. 브리핑은 역

대 국회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까지 함께 논의하다 두 의제 모두 합의에 실패해 온 만큼, 의제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숙의의 조건이라고 밝혔다.

- 별도의 선거제도개혁특위 구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대해서는 후속 정책브리핑인 <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 ②>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.

○ 정책브리핑은 22대 국회 후반기 정개특위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.

- 첫째, 최우선 과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다. 6·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국조특위가 활동 중이고 특검도 출범을 앞둔 만큼, 이들의 '진상규명'이 정개특위의 선관위 개혁 입법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.
- 둘째,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과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.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독립기구이지만 핵심 기준을 국회가 통보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국회에 종속돼 있는 만큼, 상설 독립기구로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.
- 셋째, 딥페이크·AI 선거운동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.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.
- 넷째, 지구당 부활에 따른 후속 정비와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. 지난 4월 정당법 개정으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한 만큼, 후속 제도화와 정치자금 회계 투명성 확보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.

○ 정책브리핑은 정개특위 활동의 성공을 위한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. △ 조속히 후반기 정개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착수할 것 △ 선관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할 것 △ 구성 단계에서 2028년 총선을 역산한 활동 로드맵을 확정할 것 △ 개혁의제의 대전제는 고정하되 구체적 설계는 충분한 숙의로 도출하는 원칙을 세울 것 △ 정개특위와 선거제도개혁특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할 것 등 다섯 가지다.

○ 민주연구원 최종호 연구위원은 "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개혁 의제를 숙의하고 신중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"라며 "더 이상 선거에 임박해 부칙·특례로 땀질하는 '예외상태'를 반복해선 안 되며, 남은 20개월을 벼락치기가 아닌 숙의로 채워야 한다"고 덧붙였다.